

종교,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인식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김희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종교의 영향을 간과해(religion blind) 왔다 (Kahl, 2005). 복지국가 발달론은 주로 산업화론과 권력자원론과 같이 경제 정치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종교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Castles(1994)은 그 통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종교적 신념의 촉진을 위해 이익집단들과 정당들이 형성될 수 있다. 정책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교회에 사회관계의 특정 영역의 공적인 규제를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종교적 구성과 특징은 그 나라의 복지정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종교분파들은 그 종교교리적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전개해 왔다. 한 사회에서 어떠한 종교 분파가 지배적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복지국가 발달의 정도와 성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찍이 맑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트¹⁾

*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저자 (salee@ssu.ac.kr)
현: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학력: 위스콘신-메디슨 사회복지학 박사
관심분야: 소득보장, 복지국가발달론
김희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ch12@ssu.ac.kr)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복지국가발달론, 가족정책

의 금욕적이고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윤리가 자본주의의 발달을 추동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과 개입을 요구하는 제3의 길을 주장하였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이러한 종교 교리적 차이는 각 국가들의 복지정책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야기했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현실정치에서의 종교의 힘과 영향이 복지국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종교정당들이 주도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유럽대륙에서 주도적 정당으로서의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ies)들의 존재는 종교가 정치를 통해 복지정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서구에서 근대 민족국가들의 형성과정에서 교회와 국가간의 현실적인 갈등과 타협의 양상은 각 국가의 복지정책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처럼 종교 교리적 측면에서 또한 현실정치적 측면에서 종교는 복지국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의 복지 발달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종교 분파와 복지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복지국가의 숫자가 약 20개 정도로 제한되어 계량적 실증분석에 기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종교 분파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 지금까지 종교분파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종교분파의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에 있어 엇갈린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분석자료도 ESS(European Social Survey)나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를 이용한 횡단자료로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이용 자료나 분석 시기, 그리고 대상국가 등의 차이에 따라 분석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복지발달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종교가 국민들의 복지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 자료를 이용하고 또한 이 자료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분파간의 복지인식 차이가 통시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종교와 복지 발달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한다. 종교의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또한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분석자료와 연구방법을 제시

1) 프로테스탄트(Protestantism)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교파의 총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신교(改新敎)로도 통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테스탄트와 개신교를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WVS 자료의 특성과 본 연구에 포함되는 국가들과 시기에 대해 제시한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로서, 서구 국가들에서의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와 한국에서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함의를 논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종교와 복지국가 발달

종교가 복지국가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 일련의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Wilensky, 1981; Castles, 1994; van Kersbergen, 1995; Manow, 2004; Kahl, 2005; van Kersbergen and Manow, 2009). 종교의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영향은 크게 종교교리적 측면과 역사적 현실정치 측면의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종교교리적 측면에서 종교 분파들간의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복지국가 발달에 차이를 야기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왔다. 대표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파들과 가톨릭은 그 종교교리적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형성해 온 것으로 주목받아왔다.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맑스 베버의 주장이 선구적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칼빈주의를 중심으로하는 개프로테스탄트 즉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의 교리와 가르침이 자본주의의 형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베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과 달리 선행에 의한 구원의 관념을 거부하고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운명예정설을 주장했는데, 이 신의 선택은 개인의 노동과 직업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공여부에서 현세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칼빈주의의 윤리관에서는 세속적 금욕주의를 강조하였다. 개인의 노동과 직업활동을 통한 부의 획득은 개인의 필요 충족과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으로 검약과 근면, 절제된 직업윤리를 강조하였다. 베버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의 교리와 가르침이 자본의 축적과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가져와 자본주의 발달을 추동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선행에 의한 구원을 인정하며 자선과 구제의 기능을 강조해 왔다. 또한 가톨릭의 사회교리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의 발발과 자본주의의 형성과

정에서 최초의 사회회칙으로서 1891년 교황 레오13세의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의 발표와 1931년 교황 비오 11세가 Rerum Novarum 발표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Quadragesimo Anno(40주년)"은 가톨릭의 대표적 사회교리이다. 이러한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사회주의가 아니라 제3의 길로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국가의 개입과 책임 등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Karl(2005)은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여 종교분파들간의 교리의 차이가 빈곤정책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가톨릭, 루터교, 그리고 켈빈주의간에 빈자와 자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상당한 교리적 차이가 있고, 이것이 서구 국가들의 빈곤정책 발달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톨릭에서는 빈곤을 신이 준 시련과 은혜의 상태로 보고 구걸하는 사람에 대한 자선과 선행을 통하여 죄를 면죄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일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구빈은 개인의 활동이고 기독교 지역사회의 책임으로서 국가의 법적 강제가 아니라 연민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 결과 세속적 국가에 의한 구빈활동과 빈곤정책이 발달이 지체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서 이들 국가에서는 20세기까지 최저급여에 대한 전국적 규제가 없었다.

루터주의에서는 빈곤을 신이 준 시련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게으름에 의한 빈곤을 부도덕적인 것으로 보았다. 노동은 신의 소명으로서 그 종류에 무관하게 신을 기쁘게 하는 긍정적인 활동으로서 인식되었고, 근로능력을 가진 구걸자를 비난하였다. 구원은 자선이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세속적 국가에 의한 구빈활동을 수용하여 국가에 의해 모든 빈민들을 지원해 주되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노동을 구빈의 조건으로 했다. 대표적 예가 스웨덴 등 북구국가들로서 국가에 의한 보편적이지만 워크페어적 성격이 강한 사회부조가 형성되었다.

켈빈주의에서는 빈곤을 신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신의 처벌의 징후로 보았다. 노동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끊임없이 일할 것을 강조했다. 켈빈주의의 예정설은 지역사회가 빈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을 암시했고, 빈곤자는 처벌받고 교정될 필요가 있었다. 켈빈주의에서는 원외구호가 개인들을 거지화한다고 반대하였고, 근로의 켈빈주의적 의무가 실행될 수 있는 구빈원 체계를 지지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와 같이 인구집단 별로 파편화되고 통제적인 사회부조가 형성되었다.

이와같이 종교분파들, 즉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루터교와 켈빈주의 사이에 종교교리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종교분파들간의 종교교리상의 차이에 의해 한 국가에서 어떤 종교분파가 지배적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

정책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정치의 전개에 있어서 종교적 세력들이 복지국가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서구 국가들에서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이 복지국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van Kersbergen, 1995; van Kersbergen and Manow, 2009). 복지국가의 발달에 있어 기독교민주당이 사회민주당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또한 기독교민주당과 사민당간의 노동계급을 둘러싼 정치적 지지 획득 경쟁이 복지의 확대에 기여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Wilensky(1981)은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 가톨릭 정당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톨릭 정당은 19세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유주의에 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지지하였고, 집합주의에 비해서는 경쟁 집단들의 이해갈등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서만 보다 제한적으로 국가개입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가톨릭정당은 평등주의와 유기체적 위계를 강조하는 사회적 기독교주의의 원칙들을 특성으로 한다. 월렌스키는 1919년에서 1976년까지의 서구 복지국가 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가톨릭 정당들의 지배정도(Catholic party dominance)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한 간접적으로 조합주의 체제를 통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가톨릭 정당과 좌파정당간의 경쟁이 강할 수록, 집권 좌파 정당들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Castles(1994)는 가톨릭 정당의 파워 정도만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서의 차이가 복지국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톨릭 국가군(the Catholic family of nations)을 가톨릭 세례 인구가 75%이상인 국가 또는 분석대상 시기 전 10년동안 기독교민주당이 집권한 국가로 정의하고, 1960년과 1990년의 두시기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 국가군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van Kersbergen(1995)는 기독교민주주의(Christian democracy)가 전후 유럽대륙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운동 중 하나로서 유럽에서의 복지국가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기독교민주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존재를 제안했다. 기독교민주주의는 전체 가톨릭 인구를 단일의 운동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가톨릭 정치(Catholic politics)의 후계자로서, 기독교민주주의 정당들은 전후 대표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다수 득표 정당으로서 정치체제의 핵심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기독교민주주의는 보수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고유한 정치세력으로서 사회조직의 핵심적 역할과 국가의 보충적 역할을 강조하고, 반대되는 사회 세력들간의 타협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재의 정치를 그 특징으로 한다. 기독교민주주의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영향으로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로부터 분리되었고, 종교적 영감으로 인해 특정 사회경제적 배경을 넘어 모든 투표자

들을 포괄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반 케르스베르겐은 기독교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정책의 성격을 사회자본주의(Social Capitalism)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특징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자본주의는 사회정책을 조건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함으로써 탈상품화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하위 사회조직들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불완전한 시장의 결과에 대응하여 재정을 가족 등의 하위조직에게 이전하는 수동적인 사회정책이 발전하였고, 사적으로 관리되는 그러나 공적으로 재정지원되는 정책들이 이상시되었다. 사회정책은 각 집단이 가진 권리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지위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재생산했다. 사회주의화에 반대하며 사적소유의 이념에 기반하여 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가족임금 원칙을 강조하였다.

Manow(2004)는 프로테스탄트를 루터주의와 자유교회 프로테스탄트로 구분하여, 루터주의 프로테스탄트는 자유교회 프로테스탄트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터주의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과 달리 민족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지역 교회들에 해당 교회 교인들의 복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교회와 국가간의 정체성은 통합적이었으며 국가가 복지영역에서 책임을 넘겨받는 것에 저항하지 않았다. 반면, 프로테스탄트 자유교회와 개혁교회들은 강한 반국가적 입장을 견지했고, 자조, 지역 교회의 자율성, 엄격한 국교 분리, 그리고 개인의 금욕과 절제를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달을 지체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마노우는 이러한 루터교와 자유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차이를 에스핑 앤더슨의 세가지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잘 맞지 않는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에서의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데 적용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에서는 다른 복구의 사민주의 국가들이나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자유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에스핑-앤더슨의 사민주의나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과 잘 맞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차별적인 복지국가 발달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Morgan(2009)는 종교가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 종교와 국가간의 갈등의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 발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를 둘러싼 세가지 갈등이 일-가족 정책(Work-Family Policy)에 있어서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 발달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첫째, 북구국가들에서 처럼 교회와 국가가 통합되어 종교에 기반한 갈등이 없었던 경우, 국가가 복지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국가복지를 확대시켰다. 둘째,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등의 강한 반성직자세력을 가진 가톨릭국가들에서 성직자주의 대 반성직자주의간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 한편에서는 가족과 교회 등의 지역사회조직에 의한 원조활동을 우선시 하고 국가의 보충적 개입을 주장하는 보충성과 가족주의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아 보호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 국가개입이 존재하는 두가지 측면이 혼재되는 정책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세계, 종교적 세력이 주도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이들의 이해가 수용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수용주의적 모델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고 가족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은 가족복지를 종교적 기관과 시민사회에 남겨주는 오랜 전통에 의해 제약되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나 교육 등에 있어서 보충성의 개념이 제도화되어 그 기능들이 종교적 조직과 기타 자발적 조직들로 위임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들은 종교교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 종교가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복지정책 발달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해 왔다.

2. 종교와 복지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종교는 그 종교 공동체(Religious Community)에 속한 구성원들의 관습과 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 수준에서 복지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소득·직업·연령·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 요인에 주 관심을 보여 왔다. 물론 종교의 교리 및 가치관이 개인들의 사고와 태도 그리고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분석한 문헌이 국내외에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수적으로 일부에 불과한 듯 보인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종교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교변수를 주로 종교성(Religiosity)과 종교 분파 두 측면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교성(Religiosity)은 종교 자체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선행연구들은 종교 유무와 종교활동 참여도로 종교성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종교성의 영향을 파악한 연구들 가운데,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복지인식이 낮다는 결과들을 제시했다(Stegmuller et al. 2011, Gërkhani & Koster 2012, 배은총 2014). 또 종교활동 참여도는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으나 큰 흐름은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복지인식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Finseraas 2008, Kitschelt and Rehm 2006, Stegmuller 2011, Scheve & Stasavage 2006). 즉,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종교성이 강할수록 국가 주도적인 복지에 회의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종교성은 복지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경 2015).

구체적으로 유럽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European Social Survey(ESS) 2002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 재분배 선호를 분석한 Finseraas(2008)는, 종교 활동에 참여를 덜 할수록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gmuller(2011)도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Stegmuller(2011)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결합된 ESS 데이터를 활용하여 1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종교

가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교 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재분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재분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성은 재분배 선호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을 활용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1996년 ISSP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들의 복지지출 선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Scheve and Stasavage(2006)와 Kitschelt and Rehm(2006)에서도 종교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재분배를 지지한다는 결과들을 보여 주었다. 또 2006년 ISSP 자료를 활용해 복지인식을 분석한 배은총(2014)에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 지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배은총(2014)연구에서 종교활동 참여도는 복지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은경(2005)은 ISSP(2006) 자료를 활용해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요인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종교 유무는 복지지출 분야의 재정지출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교 분파 간 차이가 복지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파악해보려는 시도도 진행되었다.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 분파의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은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강조한 가톨릭이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 하는 프로테스탄트보다 국가 주도적인 복지에 더 강한 지지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수의 연구들에서 종교 분파 간 복지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Stegmuller et al. 201, Scheve and Stasavage 2006). Stegmuller(2011)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둘 다 소득재분배에 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Scheve and Stasavage(2006)에서는 기독교(가톨릭·프로테스탄트)와 기타종교 간 복지지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배은총(2014)의 연구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신자들보다 더 높은 복지의식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종교 분파는 복지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006년 ISSP(KGSS)2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김신영(2010)의 연구에서 종교분파(가톨릭·개신교·불교)는 복지인식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종교성은 복지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복지인식에 대체로 부적인 경향을 미친 반면, 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2)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는 회원국들이 몇 가지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ISSP주제 가운데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은 국민들의 복지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1985년 1990년 1996년 2006년 총 4번 설문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2006년에 처음 설문에 참여하였다.

나타났다. 종교 분파는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 분파는 복지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 변수가 복지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 서구 복지국가 간에 또 서구 복지국가들 내에서도 일관된 분석 결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분석 시점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자료를 분석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점을 중점으로 얻어진 결과들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특정 시점의 시기 선택과 관련한 특이한 결과인지 아니면 통시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또 복지인식과 관련하여 어떤 변수를 이용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ESS(European Social Survey)³⁾를 활용했고 ESS 자료에서 복지인식은 소득 재분배 선호 문항을 활용했다. ESS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종교성은 복지인식이 부적 결과를 도출했고 종교 분파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 유럽과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연구들은 대체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⁴⁾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 연구들에서 복지인식은 복지 영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항과 복지 영역에 대한 지출을 선호하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했다. ISSP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성은 1996년 자료에서는 복지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06년 자료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종교 분파간 차이는 복지국가들을 포함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ISSP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SS 자료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서구 복지국가와 한국의 상이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며, ISSP 자료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복지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Role of Government) 모듈에 한국은 2006년 한 번 참여했기 때문에 시기별 추이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 3) ESS자료에서 종교 활동 참여도는 매일 참석한다(1점)에서부터 가본 적 없다(7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분배 선호는 “정부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개입을 해야 한다” 문항이 활용되었다.
- 4) ISSP자료는 종교활동 참여도를 일주일에 여러 번(1점)부터 전혀 가지 않는다(8점)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복지인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연금, 실업 수당 등 복지 영역에 대한 지출 선호를 묻는 문항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보장, 보건의료보장, 노인생활보장, 실업자 생활보장, 빈부 간 소득보장 완화, 주거보장 대해서 정부의 책임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표 1〉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분석자료	분석방법	연구대상	종속변수	종교변수	분석결과
복지 국가	Hemming Finseraas (2008)	ESS (2002)	다층모형	유럽 22개국 ⁵⁾	소득 재분배 신호	종교성(종교활동 참여도)	종교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재분배를 지지
	Kitschelt & Rehm (2006)	ISSP(1996)	프리빗 모형	복지국가 12개국 ⁶⁾	복지지출 신호	종교성(종교활동 참여도)	종교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재분배를 지지
	Nate Breznau (2010)	ISEA (1994-1999)	구조 방정식 (SEM)	핀란드, 폴란드, 호주 불가리아, 네덜란드	복지정책 신호	종교성(종교활동 참여도)	투입모델에 따라 영향이 일정하지 않음 (부적/정적)
	Görxhani & Koster (2012)	EVS (1999-2000)	다층모형	유럽 25개국 ⁷⁾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종교성(종교유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정부책임 지지
	Stegmueller Daniel, et al.(2011)	ESS (2002-2006)	Bayesian 모형	유럽 16개국 ⁸⁾	소득 재분배 신호	종교성(종교유무) 종교성(종교활동 참여도) 종교분과(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재분배 지지 종교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재분배 지지 유의한 차이 없음
	Scheve & Stasavage (2006)	ISSP(1996)	OLS회귀	복지국가 11개국 ⁹⁾	복지지출 신호	종교성(교회활동 참여도) 종교분과(기독교·기타)	종교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재분배를 지지 유의한 차이 없음
	배은홍(2014)	ISSP(2006)	위계적선형 모형	복지국가 22개국 ¹⁰⁾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종교성(종교유무) 종교성(종교활동 참여도) 종교분과(가톨릭·개신교·기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정부책임 지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프로테스탄트보다 가톨릭신자들이 정부책임 지지
	이은경 (2015)	ISSP(2006)	프리빗 모형	한국	복지지출 신호	종교성(종교유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김신영 (2010)	ISSP(2006)	OLS 회귀분석	한국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종교분과 (가톨릭·개신교·불교·기타)	유의한 차이 없음

- 5) 유럽 22개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
- 6) 복지국가 12개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스페인
- 7) 유럽 25개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 8) 유럽 16개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9) 복지국가 11개 국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 10) 복지국가 22개 국가: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복지국가들이 동일한 조사에 참여하고 시기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WVS(World Value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WVS 자료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80여 국가가 참여한 국제조사협력 프로젝트로 약 30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종교와 복지인식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WVS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WVS 자료를 바탕으로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종교와 복지인식의 관계를 특정 시점이 아닌 시기별 추이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분석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세계가치관조사는 국제 협력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다. 1981년부터 6번의 Wave 조사를 수행하여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다만, 세계가치관조사의 설문 문항은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식의 현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는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면 장시간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국가 내부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세계가치관조사의 설문은 종교, 성, 정치, 환경, 시민권, 이민,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복지인식으로 활용한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표 2〉 WVS에서의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문항

질문	다음 사항 중 00님의 생각에 근접한 쪽에 √표 해주십시오.(10점 척도)
문항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1점)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점)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경우 1점이고 개인 책임은 10점임으로 배정했기에 일종의 반 복지의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 문항을 역 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종교 종류를 묻는 문항은 국가마다 상이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¹¹⁾

11) 가령, 한국은 유교(Confucianism)가 하나의 종교 종류로 포함되어 있지만, 서구 국가 문항엔 찾아 볼 수 없다. 또 스웨덴은 프로테스탄트를 The church of Sweden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응답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범주를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에서 분파된 종파들을 모두 프로테스탄트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2)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은 성별, 혼인여부, 연령, 교육수준, 소득인식을 포함한다.¹³⁾

2.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한국과 서구 복지국가들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7개 국가를 선정했다.¹⁴⁾ 7개 분석 대상 국가는 지배적 종교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에서 종단 분석이 가능한 국가들을 고려했다. 가령, 분석에 포함시킨 이탈리아의 경우 5차 Wave에 한번 참여한 국가이기 때문에 시계열 추이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가톨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분석에 포함 시켰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문항은 1차 Wave에서는 빠져 있어 2차 Wave부터 분석이 가능하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2차 Wave는 스페인만 참여했기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들을 결합한 자료(pooled data) 분석은 3차 Wave부터 분석 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 2차 Wave부터 설문에 참여했으나 2차 Wave의 종속변수 코딩이 WVS에서 제공하는 자료 마다 상이하다. 또한 WVS에서는 1990년에 수행한 당시 한국의 2차 설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2차 Wave 복지인식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¹⁵⁾

12) 가톨릭은 Roman Catholic과 Catholic: doesn't follow rules를 포함시켰고, 프로테스탄트의 경우는 Protestantism와 Baptist, Jehovah Witnesses, Christian, Evangelical, Christian Reform, Church of Christ, free Church, lutheran, Pentecostal, Presbyterian, The church of Sweden, New apostolic church, Dutch Reformed,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를 포함시켰다.

13) 성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화 했다. 혼인여부 역시 더미 변수화 했고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 이혼 별거 사별 미혼을 포함했다. 교육수준은 비율변수로 처리되어있으며, 소득수준 역시 주관적 인식을 묻는 문항이다. 숫자가 클수록 주관적인 고소득의 범주에 속한다.

14) 독일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영향력이 비슷한 국가이며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는 루터주의와 칼뱅주의가 연합되어 발전된 국가이다. 스웨덴 핀란드 미국은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강한 국가이며 스웨덴 핀란드의 프로테스탄트는 루터주의의 영향이 강한 반면 미국의 프로테스탄트는 청교도의 영향이 강한 국가이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이다.

15) WVS에서는 각 Wave별 자료와 모든 Wave를 결합한 통합 자료를 모두 제공한다. 각 Wave별 자료에서는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 문항을 반 복지 의식으로 코딩해서 제공하고, 통합된 자료에서는 복지의식으로 역 코딩을 해서 제공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2차 Wave만 개별 Wave와 통합 자료 모두 복지의식으로 코딩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WVS 홈페이지에는 한국 2차 Wave 설문지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2차 Wave 복지인식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져 주요 분석에서는 제외 하였고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2차 Wave를 포함한 결과와 제외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표 3〉 분석 대상 국가 WVS 조사 참여 연도

국가	Wave1	Wave2	Wave3	Wave4	Wave5	Wave6
한국	1982	1990	1996	2001	2005	2010
미국	1981	-	1995	1999	2006	2011
독일	-	-	1997	-	2006	2013
스웨덴	1981	-	1996	1999	2006	2011
핀란드	-	-	1996	-	2005	-
스페인	-	1990	1995	2000	2007	2011
이탈리아	-	-	-	-	2005	-
네덜란드	-	-	-	-	2005	2012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 간 복지인식에 차이를 확인해 보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검정하기 위해 t 검증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종교 분파별 복지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종교 분파 집단들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검정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고 종교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으로 검증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합시계열분석(Pooled time series analysis)을 분석 모형으로 설정했다. 국가와 시기를 결합한 결합 시계열 자료를 통해, 국가와 시기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서구 복지국가들의 종교와 복지인식

1) 전체 결합자료(Pooled data) 분석

<표 4>는 각 국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3차 Wave부터 6차 Wave까지 결합된 자료이며 7개 비교 국가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이다.¹⁶⁾ 종교 유무별 복지인식을

16) 2차 Wave는 스페인만 참여했기 때문에 분석 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3차 Wave부터 분석에 포함시켰다.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 복지인식의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종교 유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분파 간 복지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우선 가톨릭은 6.0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인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복지인식은 4.94로 가톨릭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신교파별 복지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국가복지에 협조적이었다고 해석된 루터종파 신교는 기타종파 신교보다 높은 복지인식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루터종파 신교의 복지인식의 수준은 가톨릭보다는 낮았다. 기타종파 프로테스탄트 역시 가톨릭보다는 낮은 복지인식의 수준을 보였다.

〈표 4〉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 전체 결합 분석 결과

구분	종교	평균(SD)	N	t/F값	사후검증
종교 유무	종교 없음	5.83 (2.664)	7720	9.111***	-
	종교 있음	5.50 (2.659)	17043		
종교 분파	가톨릭	6.00 (2.647)	9018	382.015***	가톨릭>프로테스탄트 가톨릭>무교 무교>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4.94 (2.563)	7992		
	무교	5.83 (2.664)	7720		
신교 종파	가톨릭	6.00 (2.647)	9018	274.047***	루터신교>기타신교 가톨릭>루터신교 가톨릭>기타신교 가톨릭>무교 무교>루터신교 무교>기타신교
	루터종파 신교	5.15 (2.456)	4348		
	기타종파 신교	4.70 (2.665)	3644		
	무교	5.83 (2.664)	7720		

*p<.05, **p<.01 ***p<.001

〈표 5〉는 종교 유무별 종교 분파별 복지인식의 차이를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것이다. 4차 Wave를 제외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인식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는 3차와 5차 Wave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Wave별로 조사를 수행한 국가들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종교 분파별 차이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종교 분파 간 차이가 강하게 나타났다. 3차 Wave부터 6차 Wave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Wave에서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보다 정부의 복지책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으로 개신교 종파별 복지인식도 시기별로 추이를 비교 분석을 해 보았다. 4차 Wave에 참여한 국가들

은 개신교 종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4차 Wave 값은 확인하기 어렵다. 3차 Wave에서는 루터종파 신교가 기타종파 신교보다 복지인식이 낮았으나, 5차와 6차 Wave에서는 루터종파 신교의 복지인식 정도가 기타종파 신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 전체 결합 시기별 분석 결과

구분	Wave	종교	평균(SD)	N	t/F 값	사후검증
종교 유무	3	종교 없음	5.98 (2.832)	1610	11.637***	-
		종교 있음	5.03 (2.729)	4597		
	4	종교 없음	5.75 (3.116)	432	-.835	
		종교 있음	5.89 (2.853)	1536		
5	종교 없음	6.04 (2.594)	2269	5.657***		
	종교 있음	5.68 (2.513)	5475			
6	종교 없음	5.58 (2.532)	3176	.187		
	종교 있음	5.57 (2.568)	4312			
종교 분파	3	가톨릭	5.76 (2.786)	1768	177.037***	가톨릭>프로테스탄트 무교>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4.57 (2.592)	2824		
		무교	5.98 (2.832)	1610		
	4	가톨릭	6.43 (2.709)	1216	111.225***	가톨릭>프로테스탄트 가톨릭>무교 무교>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3.85 (2.432)	320			
무교		5.75 (3.116)	432			
5	가톨릭	6.15 (2.443)	2738	108.890***	가톨릭>프로테스탄트 무교>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5.22 (2.497)	2711			
	무교	6.04 (2.594)	2269			
6	가톨릭	5.88 (2.577)	2180	33.827***	가톨릭>프로테스탄트 무교>가톨릭 무교>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5.25 (2.519)	2132			
	무교	5.58 (2.532)	3176			
신교 종파	3	가톨릭	5.76 (2.786)	1768	162.170***	가톨릭>루터신교 기타신교>루터신교 무교>루터신교 무교>기타신교 가톨릭>기타신교
		루터종파 신교	3.71 (2.074)	849		
		기타종파 신교	4.94 (2.702)	1975		
		무교	5.98 (2.832)	1610		
	5	가톨릭	6.15 (2.443)	2738	77.574***	루터신교>기타신교 가톨릭>루터신교 가톨릭>기타신교 무교>루터신교 무교>기타신교
		루터종파 신교	5.31 (2.443)	2153		
		기타종파 신교	4.86 (2.647)	558		
		무교	6.04 (2.594)	2269		
	6	가톨릭	5.88 (2.577)	2180	73.199***	루터신교>기타신교 가톨릭>루터신교 가톨릭>기타신교 가톨릭>무교 무교>기타신교
루터종파 신교		5.78 (2.341)	682			
기타종파 신교		4.33 (2.551)	786			
무교		5.58 (2.532)	3176			

*p<.05, **p<.01 ***p<.001

2) 개별 국가들의 시기별 분석

<표 6>과 <표 7>은 각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 내에서 시기별로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은 각 국가 내에서 시기별로 종교유무 별로 복지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대체로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에 있어서는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종교 유무에 따른 복지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에는 3차 시기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차 시기에는 10%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6차 시기에는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종교유무와 복지인식간의 시기별 분석 결과

국가	Wave (연도)	종교	평균(SD)	N	t 값	유의확률
미국	3(1995)	종교 없음	4.07 (2.692)	309	2.238	.025*
		종교 있음	3.68 (2.549)	808		
	4(1999)	종교 없음	4.45 (2.905)	244	1.752	.080
		종교 있음	4.07 (2.584)	593		
5(2006)	종교 없음	5.57 (2.485)	308	5.248	.000***	
	종교 있음	4.63 (2.625)	642			
6(2011)	종교 없음	5.21 (2.884)	728	6.351	.000***	
	종교 있음	4.33 (2.775)	992			
독일	3(1997)	종교 없음	6.73 (2.622)	954	8.915	.000***
		종교 있음	5.67 (2.607)	998		
	5(2006)	종교 없음	6.62 (2.549)	847	1.651	.099
종교 있음		6.43 (2.500)	1085			
6(2013)	종교 없음	6.17 (2.557)	623	.094	.925	
	종교 있음	6.16 (2.423)	1221			
스페인	2(1990)	종교 없음	6.42 (2.656)	233	3.497	.001**
		종교 있음	5.74 (2.874)	1123		
	3(1995)	종교 없음	6.57 (2.584)	157	.135	.891
		종교 있음	6.54 (2.640)	981		
	4(2000)	종교 없음	7.45 (2.508)	188	2.163	.031*
종교 있음		7.03 (2.382)	943			
5(2007)	종교 없음	6.91 (2.422)	215	2.310	.021*	
	종교 있음	6.51 (2.225)	931			
6(2011)	종교 없음	6.81 (2.418)	276	1.361	.174	
종교 있음	6.59 (2.229)	847				

국가	Wave (연도)	종교	평균(SD)	N	t 값	유의확률
스웨덴	3(1996)	종교 없음	4.04 (2.197)	77	1.323	.186
		종교 있음	3.71 (2.074)	913		
	5(2006)	종교 없음	4.68 (2.389)	248	1.010	.313
		종교 있음	4.51 (2.106)	723		
핀란드	3(1996)	종교 없음	5.35 (2.423)	113	.026	.979
		종교 있음	5.35 (2.481)	825		
	5(2005)	종교 없음	5.16 (2.491)	135	.862	.389
		종교 있음	4.98 (2.256)	847		
네덜란드	5(2005)	종교 없음	5.84 (2.521)	401	.660	.509
		종교 있음	5.72 (2.442)	385		
	6(2012)	종교 없음	5.20 (2.099)	1154	1.160	.246
		종교 있음	5.07 (2.113)	524		
이탈리아	5(2005)	종교 없음	6.02 (2.530)	116	-1.024	.306
		종교 있음	6.27 (2.482)	862		

*p<.05, **p<.01 ***p<.001

<표 7>은 각 국가 내에서 시기별로 종교 분파별 복지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앞에서 결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와 달리, 미국을 제외하고는 종교 분파별 복지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신자들보다 복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차와 6차 Wave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3차와 5차 Wave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복지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표 7>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다시 루터종파 신교와 기타종파 신교로 구분하여 양자 간의 복지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루터종파 신교와 기타종파 신교간의 구분이 가능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종교종류 코딩에서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에 대해서만 루터종파 신교와 기타종파 신교간의 복지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 루터종파 신교와 기타종파 신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복지인식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7〉 종교분파와 복지인식간의 시기별 분석 결과

구분	국가	Wave	종교	평균(SD)	N	t 값	유의확률
종교 분파	미국	3(1995)	가톨릭	3.89 (2.614)	344	1.904	.057
			프로테스탄트	3.55 (2.501)	537		
		4(1999)	가톨릭	4.40 (2.730)	280	2.913	.004**
			프로테스탄트	3.78 (2.413)	313		
	5(2006)	가톨릭	4.77 (2.651)	252	1.102	.271	
		프로테스탄트	4.54 (2.607)	390			
	6(2011)	가톨릭	4.80 (2.880)	458	5.020	.000***	
		프로테스탄트	3.92 (2.615)	534			
	독일	3(1997)	가톨릭	5.54 (2.459)	396	-1.322	.183
			프로테스탄트	5.76 (2.698)	602		
		5(2006)	가톨릭	6.21 (2.441)	424	-2.383	.017*
	6(2013)	가톨릭	6.15 (2.626)	543	-.061	.951	
		프로테스탄트	6.16 (2.250)	679			
	스페인	2(1990)	가톨릭	5.74 (2.877)	1117	-3.300	.764
			프로테스탄트	6.09 (2.465)	6		
		3(1995)	가톨릭	6.55 (2.644)	973	.730	.465
			프로테스탄트	5.86 (2.025)	8		
		4(2000)	가톨릭	7.04 (2.390)	936	.422	.686
	5(2007)	가톨릭	6.50 (2.224)	927	-1.529	.112	
	프로테스탄트	8.28 (1.752)	4				
	6(2011)	가톨릭	6.60 (2.221)	837	1.499	.134	
	프로테스탄트	5.55 (2.719)	10				
	스웨덴	3(1996)	가톨릭	4.29 (2.610)	21	1.024	.318
			프로테스탄트	3.70 (2.059)	892		
5(2006)		가톨릭	4.97 (2.155)	16	.887	.375	
6(2011)	가톨릭	5.63 (2.388)	15	.290	.772		
프로테스탄트	5.45 (2.177)	712					
핀란드	3(1996)	가톨릭	5.53 (2.326)	34	.427	.670	
		프로테스탄트	5.34 (2.489)	791			
5(2005)	가톨릭	4.39 (2.722)	2	-3.382	.703		
프로테스탄트	4.98 (2.256)	845					
네덜란드	5(2005)	가톨릭	5.81 (2.365)	254	.959	.338	
		프로테스탄트	5.56 (2.585)	131			
6(2012)	가톨릭	5.14 (2.191)	327	.908	.364		
	프로테스탄트	4.96 (1.978)	197				
신교 교파	스웨덴	3(1996)	루터종파 신교	3.71 (2.074)	849	.685	.493
			기타종파 신교	3.49 (1.751)	43		
		5(2006)	루터종파 신교	4.48 (2.069)	672	-0.948	.350
	기타종파 신교	4.95 (2.772)	32				
	6(2011)	루터종파 신교	5.47 (2.405)	682	1.190	.234	
		기타종파 신교	4.94 (1.918)	29			
	핀란드	5(2005)	루터종파 신교	4.99 (2.249)	816	.207	.836
기타종파 신교			4.90 (2.483)	29			

*p<.05, **p<.01 ***p<.001

3) 전체 결합(Pooled data) 회귀 분석

<표 8>은 복지국가들에서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이다. 세 개의 모델을 분석했는데, 세 모델 모두에서 시기효과와 국가효과를 통제하였다. 각 Wave 시기별로 유사한 시기에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선호에 있어 공통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Wave 더미 변수들은 이러한 시기 효과를 통제한다. 또한 각 국가별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선호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차이나는 공통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 더미 변수들은 이러한 국가 효과를 통제한다. 통제변수로는 성, 혼인 여부,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소득수준을 투입하였다. 이처럼 시기효과와 국가효과, 그리고 통제변수들을 통제하면서, 세 가지의 모델을 분석하였다. 모델 1에서는 종교 유무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종교 분파 변수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모델 3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다시 구분하여 루터종파 신교와 기타종파 신교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통제변수들의 경우, 성별에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복지인식이 높았고 기혼자의 복지인식이 미혼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주관적 소득수준도 복지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996년을 기준으로 한 3차 Wave에 비해 2010년을 기준으로 6차 Wave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국가효과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국가더미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뚜렷하게 국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 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모델 1의 경우 종교 유무 변수에서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국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모델 2에서 종교 분파 변수를 보면 가톨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보다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또한 가톨릭 신자들에 비해 종교가 없는 무교자들의 국가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모델 3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루터종파와 기타종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톨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루터종파 와 기타종파 모두 가톨릭에 비해 국가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7) 스웨덴과 핀란드는 루터파 신교가 지배적 종교의 지위를 영위하는 국가들로 WVS에서는 스웨덴은 The church of Sweden로, 핀란드는 Evangelical로 신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분석 대상 국가인 독일도 신교를 Evangelical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독일의 Evangelical은 루터파와 기타종파가 혼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독일을 제외하고 분석을 추가 분석을 해 보았다. 결과는 $t=-6.089^{***}$, 비종파신교 $t=-5.478^{***}$, 무교는 $t=-1.363^{**}$ 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였다.

〈표 8〉 복지인식에 대한 종교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model 0		model 1		model 2	
	B	t	B	t	B	t
성별 (남성=0)	.196	5.677***	.195	5.642***	.195	5.642***
혼인여부(배우자무=0)	-.001	-.031	-.003	-.083	-.003	-.083
연령	-.007	-6.644***	-.007	-6.582***	-.007	-6.580***
교육수준	-.059	-6.678***	-.058	-6.576***	-.058	-6.570***
주관적 소득수준	-.149	-17.144***	-.149	-17.216***	-.149	-17.206***
Wave 6차 (2010)기준						
5차 (2005)	-.010	-.226	-.007	-.145	-.007	-.145
4차 (2001)	-.056	-.763	-.058	-.782	-.058	-.781
3차 (1996)	-.439	-9.085***	-.432	-8.946***	-.432	-8.650***
국가 (미국) 기준						
독일	1.684	31.174***	1.686	31.224***	1.686	29.600***
스페인	2.018	34.343***	1.914	30.130***	1.914	29.778***
이탈리아	1.553	14.242***	1.436	12.776***	1.436	12.765***
네덜란드	.459	6.548***	.440	6.266***	.440	6.252***
스웨덴	.250	4.154***	.323	5.171***	.323	4.358***
핀란드	.588	7.916***	.670	8.743***	.670	8.541***
종교유무(무교=0)	-.379	-9.694***				
종교분파(가톨릭기준)						
무교			.252	5.168***		
프로테스탄트			-.235	-4.320***		
종교분파(가톨릭)기준						
무교					.252	5.153***
루터종파 신교					-.235	-3.420***
기타종파 신교					-.235	-3.781***
상수	6.192	62.418***	5.939	56.745***	5.939	56.674***
R square	.145		.146		.146	

*p<.05, **p<.01 ***p<.001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종교와 복지인식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의 모든 이용 가능한 시기들을 포함한 결합자료에서는 종교 유무 및 종교 분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국가 내에서 시기별로 분석한 경우에는, 미국, 독일, 스페인의 경우에는 종교 유무간에 복지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들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종교

분과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시기효과 및 국가효과를 통제하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교 유무와 종교 분과 모두에서 국가 복지책임 선호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종교와 복지인식

1) 전체 결합자료(Pooled data) 분석

<표 9>는 3차부터 6차까지 한국 데이터를 결합(Pooled)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종교 유무에 따른 국가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 종교가 있는 사람의 평균이 거의 비슷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종교 분과의 경우 가톨릭이 개신교, 불교, 그리고 무교에 비해 국가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9>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 전체 결합 분석 결과

구분	종교	평균(SD)	N	t/F값
종교 유무	종교 없음	7.65 (2.261)	1760	-1.23
	종교 있음	7.66 (2.328)	2900	
종교 분과	가톨릭	7.85 (2.199)	764	2.210
	개신교	7.58 (2.283)	1015	
	불교	7.61 (2.447)	1121	
	무교	7.65 (2.261)	1760	

*p<.05, **p<.01 ***p<.001

2) 시기별 분석

<표 10>은 한국 자료의 각 Wave별로 종교 유무와 종교 분과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종교 유무의 경우, 5차 6차 Wave에서는 종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복지의식이 높았고 3차와 4차에서는 종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복지의식이 더 높았다. t검정 결과 3차 Wave와 6차 Wave에서의 종교 유무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기들 간에 종교 유무간 국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못했다. 다음으로 각 Wave별로 종교 분과간 복지인식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

해본 결과 3차, 5차, 6차 Wav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3차 Wave에서는 가톨릭신자들이 복지인식이 가장 높았고 개신교 불교 순을 보였는데, 사후검증 결과 가톨릭과 무교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 Wave에서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순으로 복지인식의 수준을 보였는데, 불교와 개신교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차 Wave에서는 가톨릭이 가장 높은 복지수준을 보였고 개신교 불교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톨릭-개신교 그리고 가톨릭-불교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 전체 결합 시기별 분석 결과

구분	Wave	종교	평균	N	t/F 값	사후검정
종교 유무	3(1996)	종교 없음	7.55 (2.430)	478	-2.922**	-
		종교 있음	7.96 (2.248)	698		
	4(2001)	종교 없음	7.77 (2.273)	439	-1.388	
		종교 있음	7.96 (2.202)	700		
	5(2005)	종교 없음	7.59 (2.248)	350	1.068	
		종교 있음	7.44 (2.448)	817		
	6(2010)	종교 없음	7.69 (2.084)	493	2.850**	
		종교 있음	7.32 (2.315)	685		
종교 분파	3(1996)	가톨릭	8.19 (1.948)	157	3.694*	가톨릭>무교
		개신교	7.96 (2.283)	215		
		불교	7.85 (2.354)	326		
		무교	7.55 (2.430)	478		
	4(2001)	가톨릭	7.93 (2.194)	166	.694	
		개신교	8.00 (2.161)	284		
		불교	7.94 (2.261)	250		
		무교	7.77 (2.273)	439		
	5(2005)	가톨릭	7.53 (2.494)	254	2.988*	불교>개신교
		개신교	7.11 (2.421)	265		
		불교	7.65 (2.408)	298		
		무교	7.59 (2.248)	350		
	6(2010)	가톨릭	7.90 (1.915)	187	10.063***	가톨릭>불교 가톨릭>개신교 무교>불교
		개신교	7.29 (2.134)	251		
		불교	6.90 (2.657)	247		
		무교	7.69 (2.084)	493		

*p<.05, **p<.01 ***p<.001

3) 회귀분석

<표 11>18)은 한국에 있어서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이다. 통제변수들의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국가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가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회귀분석 결과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소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가장 최근 Wave인 6차의 경우, 3차 및 4차 Wave 시기에 비해 국가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 1에서 종교 유무에 따른 복지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종교 분파 더미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가톨릭 신자들의 국가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개신교, 불교, 그리고 무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복지인식에 대한 종교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model 0		model 1		model 2	
	B	t	B	t	B	t
성별 (남성=0)	.253	3.695***	.266	3.794***	.263	3.752
혼인여부 (배우자무=0)	.024	.289	.025	.298	.027	.322
연령	-.013	-3.719***	-.012	-3.525***	-.012	-3.530***
교육수준	.045	1.997*	.057	2.490*	.037	1.675
주관적 소득수준	-.006	-.310	-.019	-.983	-.018	-.948
Wave 6차 (2010)기준						
5차 (2005)	-.005	-.052	-.016	-.171	-.026	-.267
4차 (2001)	.343	3.583**	.347	3.586***	.354	3.663***
3차 (1996)	.285	2.947***	.282	2.885**	.286	2.916**
종교유무(무교=0)			.027	.381		
종교분파(가톨릭기준)						
무교					-.223	-2.200*
개신교					-.307	-2.793**
불교					-.225	-2.063*
상수	7.612	30.448***	7.582	29.887***	7.809	29.703***
R square	.019		.020		.022	

*p<.05, **p<.01 ***p<.001

18) 2차 Wave 추가했을 경우, 종교유무는 (b=.042 t=.623)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종교분파도 2차 Wave 를 제외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무교는 b=-.229, t=-2.397* 프로테스탄트는 b=-.307, t=2.324* 불교는 b=-.225, t=-2.594*)를 보였다.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의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전체시기를 합한 결합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각 시기별 분석 결과 종교유무에 따른 복지인식 차이는 결과가 엇갈리게 나타나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종교분파에 따른 복지인식의 경우, 가장 최근 시기에서 가톨릭의 국가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시기들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 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최근 시기들에 들어와 국가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종교 유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톨릭-개신교 및 가톨릭-불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복지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종교(분파)와 복지국가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고, 종교의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WVS 3차부터 6차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와 국가 복지책임 인식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자료와 한국의 자료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전체 자료를 결합하여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분석에서는 종교유무와 종교분파 간 복지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는 국가 간 그리고 시기 간 차이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둘째, 각 국가 내에서 시기별로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미국의 경우 상당히 뚜렷하고 일관되게 종교유무에 따라 그리고 종교분파들 간에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가장 최근 시기에 구교의 신교에 대한 국가 복지책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복지국가들에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시기효과와 국가효과를 통제하면서 종교의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교분파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구 복지국가와 한국의 분석 모두에서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에 비해 국가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종교 분파들 간에 특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교간에 국가복지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갤럽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 무교 50%, 개신교 21%, 가톨릭 7%, 불교 22%로 개신교와 불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한국은 미국의 영향으로 퀘빈주의에 가까운 개혁 자

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비중이 크다. 반면 가톨릭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기독교 중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톨릭의 비중이 낮고 국가복지 선호도가 낮은 개신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 달리 불교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불교의 국가복지에 대한 선호도는 시기별 분석결과 상당히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종교인 분포에 있어서 개신교 만큼 큰 비중을 가진 불교가 국가복지에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는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불교의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런데 실제 분석 가능한 자료가 거의 1996년을 기준으로 하는 Wave 3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대상 시기가 짧았다. 종교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복지국가 형성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대상 시기가 상대적으로 최근으로 제한되어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충분히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불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한국에서 불교와 국가복지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배은총, (2014).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 연구 : 개인의 종교적 특성과 복지태도 간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 (2015).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재정포럼* 201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Breznau, Nate.(2010). Economic equality and social welfare: Policy preferences in five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4), 458-484.
- Castles, Francis G. (1994). On Religion and Public Policy: Does Catholicism Make a Differ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5, 19-40.
- Finseraas, Henning.(2009). Income inequality and demand for redistribution: a multilevel analysis of European public opinio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1), 94-119.
- Gërçhani, Klarita, and Ferry Koster. (2012). 'I am not alone': Understanding public support for the

-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ology*, 27(6), 768-787.
- Hornsby-Smith, Michael. (1999). The Catholic Church and Social Policy in Europe. In Prue Chamberlayne (eds.), *Welfare and Culture in Europe: Towards a New Paradigm in Social Polic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72-189.
- Kitschelt, Herbert, and Philipp Rehm. (2006). New social risk and political preference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52-82.
- Manow, Philip. (2004).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Esping-Andersen's Regime Typology and the Religious Roots of the Western Welfare State. MPIfG Working Paper, No. 04/3.
- Morgan, Kimberly. (2009). The Religious Foundations of Work-Family Policies in Western Europe. In Kees van Kersbergen (eds.), *Religion,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6-90.
- Scheve, Kenneth, and David Stasavage. (2006) Religion and preferences for social insurance.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 : 255-286.
- Kahl, Sigrun. (2005). The Religious Roots of Modern Poverty Policy: Catholic, Lutheran, and Reformed Protestant Traditions Compared.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46, 91-126.
- Stegmueller, Daniel. Scheepers, Peer. Rossteutscher, Sigrid. De Jong, Eelke. (2012).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Western Europe: Assessing the role of relig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4), 482-497.
- van Kersbergen, Kees. (1995). *Social Capitalism: A Study of Christian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Routledge.
- van Kersbergen, Kees. (2009). *Religion,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ine Books.
- Wilensky, Harold. L. (1981). Leftism, Catholicism, and Democratic Corporatism: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Recent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Peter Flora and Arnold J. Heidenheimer (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Books, 345-382.